“국고 보조금은 눈먼 돈”

공무원 부족 현장실사 대신 서류심사

농어민들 피해 부풀리기에 ‘속수무책’

국고보조금이 허술한 관리체계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소홀로 줄줄 새고 있다. 막대한 국고보조금이 사업 및 피해 규모 부풀리기, 겉핥기 현장 확인 등으로 낭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 때문에 양식장이 파손된 김모(43·완도군 약산면)씨 등 양식업자 12명은 완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복구비를 지원받게 되자, 실제로 쓰지 않은 복구비를 지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7억4천만원을 가로챘다가 최근 목포해경에 붙잡혔다.

〈본보 10월21일자 3면〉

김씨 등은 ‘자연재난피해신고서’와 ‘어류(종묘) 입식 및 출하(판매)신고서’를 작성한 뒤 어촌계장의 확인서만 받아 군에 제출토록 되어있는 규정의 허점을 노려 거액을 허위로 받아냈다. 김씨 등이 정부에 신청한 국고보조금 중 85%는 허위신고였다.

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도 관리 부실은 마찬가지다. 목포에서는 지난달 ‘배합사료 국고보조금’(배합사료 직불제)을 횡령한 양식업자들이 적발됐고, 구례에서는 서류를 위조해 장뇌삼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영농조합 대표가 붙잡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재난 복구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피해자가 신고한 출하·판매량을 바탕으로 공무원들이 피해 규모를 실사를 한 뒤, 사실 확인을 거쳐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현장확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1개 읍·면에 1~3명에 불과, 정확한 조사를 벌이지 못하고 피해 주민의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 허위신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사업별로 필요한 자재나 종자 등을 구입할 경우 대금의 영수증만 첨부하면 곧바로 보조금을 통장입금을 해주도록 돼있어 사업자와 중간상인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사업자 자부담은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하도록 규정돼 있는 점을 악용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작성한 영수증을 첨부하더라도 이의 진위 여부를 가려낼 수 없는 맹점도 노출되고 있다. 이외 관리감독 기능이 여러 실·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사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피해나 사업 규모를 부풀려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속이려 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본 예산 기준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 국고보조금은 7천411억여원,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2조 1천960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구례=김동호기자 dhkim@kwangju.co.kr

중·고교 부교재 리베이트

근무일지 ‘접대’ 항목 조사

광주·전남지역 학교의 부교재 채택 리베이트〈본보 10월 19일자 7면〉를 수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은 23일 압수수색을 실시한 모 출판사 광주총판 사장 김모(50)씨를 불러 추가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서 김씨는 “영업사원 1명당 월 1천만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본사로부터 책값의 65%에 책을 공급받아 10%의 이윤을 남기고 25%는 서점·학원 등의 몫으로 간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25% 가운데 일부가 이 출판사 교재를 수업용으로 채택한 학교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일부 근무일지에 ‘식사’와 ‘접대’라는 항목이 구분돼 있는 점을 중시, ‘접대’의 성격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광주총판 사무실에서 압수한 영업장부와 근무일지 등을 재분석하고, 혐의사실이 드러날 경우 장부에 이름이 올라 있는 교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벌일 방침이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여천 NCC “부분 작업중지”

노동청, 파업으로 안전사고 위험

지난 7일부터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벌이고 있는 여수산단의 여천 NCC 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청이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은 23일 여천 NCC에 “‘에틸렌 제1공장’ E-GB201 공정 콤프레샤 지역의 배관 철거작업을 중지하라”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노동청은 “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해 배관 절단 작업을 한 것은 안전상의 조치를 미이행한 것이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에틸렌 제1공장’에서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콤프레샤 압축기 지역 흡인배관을 산소절단기로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배관에 남아 있던 ‘하이드로 카본’(Hydrocarbon·탄화수소) 찌꺼기에 불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했다.

노동청은 앞서 지난 22일에도 ‘에틸렌 제 1공장’ 5층(C2지역) 철골 보강 작업에 대해서도 “추락·감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 증설 공사가 진행 중인 ‘에틸렌 제 1공장’은 현장 안전요원 정원이 95명이지만 27명만 근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파업에 참가해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그러나 노조가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에틸렌 제 1공장’ 전체에 대한 작업 중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여천 NCC 노조는 지난 7일부터 임금 6.77%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조선대병원-완도 덕우도

원격 화상진료 시작

조선대병원(병원장 홍순표)이 23일 완도 덕우도와 ‘희망의 e-닥터 원격 화상진료 시스템’ 시연식을 갖고 운영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무의도서(無醫島嶼)인 덕우도 주민 165명이 매주 목요일 마을 보건진료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조선대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처방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주민들은 의사의 얼굴을 보며 증상을 설명할 수 있고, 의료진은 미리 저장된 정보를 통해 처방을 내리게 된다. 조선대 의료진 18명은 앞서 덕우도를 방문, 심전도·혈액·소변검사와 상담 등 주민들의 기초진료를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영광원전 온배수 확산 범위

환경평가 예측 크게 초과

피해보상 논란 일 듯

영광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溫排水)의 확산 범위가 10여 년 전 진행됐던 환경영향평가의 예측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열린우리당 제종길 의원이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995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섭씨 1도 상승 온배수 최대 확산거리를 ▲북측 4.5km ▲남측 6.0km로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해양연구원이 지난 2001년 4월~2005년 8월 영광원전 주변 해역에서 실시한 ‘광역해양 환경조사’ 결과, 섭씨 1도 상승 온배수의 최대 확산거리는 ▲북측 17.0km ▲남측 20.2km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로 인한 어업피해 영향범위도 환경부는 ▲북측 13.0km ▲남측 8.3km라고 예상한 반면, 한국해양연구원 조사에서는 ▲북측 17.0km ▲남측 20.2km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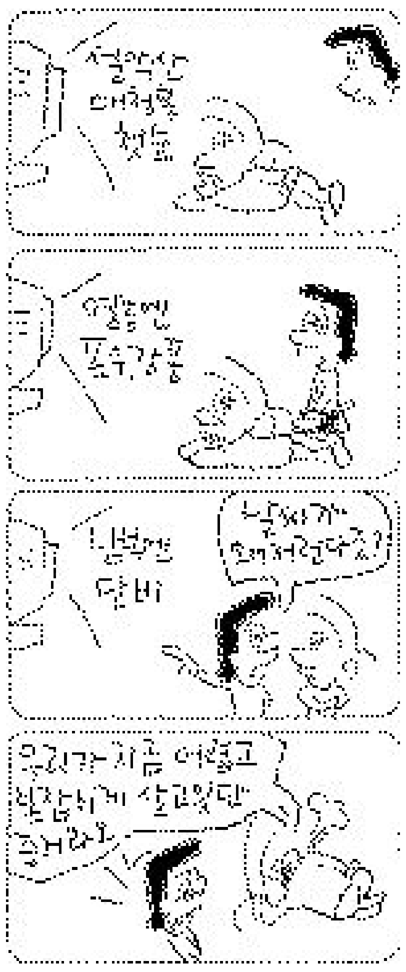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환경영향평가보다 정확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한전과 어민들 간 온배수 피해 보상금 추가 지급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광군의 경우 온배수로 인해 어업량 생산량 감소량에 따른 피해율이 81.96%에 달하고 있으며, 원전 개소 이후 총 2천88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온배수(溫排水)=화력 또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냉각하는 데 사용한 후,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하는 따뜻한 물. 바다에 방출되는 순간의 온배수는 보통 해수보다 섭씨 7도가량 높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위 해수와 혼합돼 온도가 떨어진다.

나웃참 김종두 〈6957〉



“헌금 납부 못했다” 40년만에 참회

쌍나팔

○…50대 군인이 중학교에 다니던 중 급우들로부터 걷었던 헌금을 제대로 교회에 내지 못한 죄를 가슴깊이 묻어둔 채 살아오다 40년 만에 참회해 화제.

○…23일 광주 숭일중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재직 중인 박모(53)씨가 최근 한 통의 편지를 보내 “중 2, 3학년 시절이던 지난 1966~1967년께 종교부장으로 일하던 중 급우들에게 모은 헌금 일부를 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졸업할 때까지 돌려받지 못해 결국 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는 것.

○…박씨는 “지금은 헌금을 빌려간 친구의 이름도, 헌금의 액수도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헌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 일만은 ‘마음의 빚’으로 남아 뒤늦게나마 사죄를 구하게 됐다”며 50만원짜리 자기앞 수표 한 장을 편지에 동봉.

○…이 학교 박창선 교장은 “박씨의 뒤늦은 참회는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가르침으로 새겨질 것”이라며 “보내온 돈은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